

2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20-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의한다.

② 이 규칙은 연구원의 소속 직원 및 연구보조 인력, 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원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연구 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원장, 외부위원 중 연장자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권리보호

제8조(제보)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검증 책임주체)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시효)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 또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대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본 조사·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예비조사 착수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2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불출석시에는 사업기관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90일 이내에 제보내용, 관련증거, 진술서, 조사결과, 제재조치 건의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 조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판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에게 피조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이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제20조(심의·의결 및 징계) ① 원장의 제재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확인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 제7장(징계)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며,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④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와 보고)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칙

[별표 1]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및 주의·경고

위반의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강	중	약
고의·중과실	중징계1) 의결요구	경징계2)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3)
경과실	경징계2) 의결요구	주의 또는 경고3)	

- 1) 중징계 : 파면, 정직
- 2) 경징계 : 감봉, 견책
- 3) 서면 주의 또는 서면 경고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연구 계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소속기관 등에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통 의무사항

-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 내부 연구자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등의 조치